

시론



진 호 림
㈜리얼프로텍 대표이사

해는 바뀌었지만, 정치적 혐오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현수막은 여전히 거리를 뒤덮고 있다. 수위는 자극적이고 호소는 절박해졌지만, 정작 눈길을 끈 것은 서석고등학교 동문회가 내건 ‘수능 만점’, ‘전국 수석’ 축하 현수막이었다. 성과도 자랑스러웠지만, 노력의 결실을 드러내놓고 축하하는 모습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한때 ‘실력 광주’는 지역 교육의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서열 조정’, ‘위화감 조성’이라는 이유로 공개적인 칭찬이 금기시됐다. 현수막을 내리고, 등수를 감추며, 성과를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칭찬하는 일조차 ‘눈치’를 봐야 했다. 그 결과는 상황이 아닌 ‘하향 평준화’에 가까운 평등이었다. 보호가 오히려 학생들의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된다.

‘왜곡된 보호’ 논리가 학교 담장을 넘어 도시의 의사결정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 대중교통의 기형적 구조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광주의 지하철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종합버스터미널을 지나지 않는다. 예산 문제도 있었겠지만, “지하철이 터미널

광주, ‘왜곡된 보호’의 멍에서 벗어나야 한다

을 지나면 택시와 버스 승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운수업계의 반발을 우려한 정부적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광주 대중교통은 좋아졌는가. 지하철은 운영예산의 70%를 시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시내버스 회사에는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혈세가 지원된다. 택시 업계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울 처지다. 시민 전체의 편익보다 특정 집단의 이해를 앞세운 ‘보호 행정’이 빚어낸 구조적 실패다.

광주에는 코스트코나 스타필드 같은 대형 복합쇼핑몰이 없다. 시장 진출 시도는 있었지만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대 논리에 번번이 막혔다. 그 보호의 성과는 무엇인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키려던 골목상권은 살아났는가. 현실은 정반대다. 도심 상권은 더 빠르게 쇠락했고, 시민들의 원정 쇼핑으로 지역 자본은 외부로 빠져나갔다.

‘왜곡된 보호’의 폐해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사태에서도 드러난다. GGM은 노사가 조급식 양보해 상생하자는 사회적 대타협 위에 세워진 회사다. 출범 4년 만에 누적 생산 20만 대를 돌파했지만, 빛나는 성과 뒤로 ‘이거 적 보호’ 논리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누적 35만 대 생산까지 파업은 없다”던 약속은 이익이 발생하자마자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명분 아래 흔들리고 있다.

본질은 분명하다. 광주를 병들게 한 것은 외부의 차별이나 자본의 냉혹함이 아니다. 불편한 선택을 회피하고, 약속을 가볍게 뒤

집어 온 내부의 태도다. 교육에서는 경쟁을, 교통에서는 효율을, 상권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을, 산업 현장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희생시켰다. 모든 결정의 명분은 ‘보호’였지만, 그 보호가 과연 도시 전체의 이익이었던지는 따져볼 일이다.

다행히 변화의 기회는 열리고 있다. 더현대 광주,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등 대형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며 지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보복 소비의 호황기는 이미 지났다. 불경기과 공사비 급등이라는 악재 속에서, 이들 사업마저 ‘보호 논리’의 멍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도 급부상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거대 자치단체 탄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발이나 구호가 아니라,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도시의 생존 전략이다. 군 공항 이전도, 행정통합도 결국 타이밍의 문제다. 주어진 기회를 머루지 말고 밀어붙이는 결단이 필요하다.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비상계엄은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광주에는 꼭 막힌 정체를 돌파할 정치적 동력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광주는 지금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 보호라는 명분 뒤에 머물 것인지, 책임과 신뢰, 공정한 경쟁 위에서 다시 서는 길로 나아갈 것인지 답해야 한다. 기회의 창은 오래 열려 있지 않다.

자치칼럼



서 순 복
포자주자시민들 대표회장
조선대 법학과 명예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하 AI)과 로봇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광주는 몇 년 전 AI 중심도시로 지정됐고, 해남 솔라시도에는 AI 데이터센터가 유치됐다. 일상생활에서도 제미나이나 챗GPT를 이용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신통방통할 정도로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알려준다. 시니어 세대들은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주문에 익숙하지 않아 나이 든 서러움을 느끼곤 하는데, AI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이러한 디지털 지체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 추측된다. 미래학교에서는 AI 기반의 개인별 맞춤 학습을 통해, VR, 드론, 코딩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들과 함께 협업하며, 미래학교에서 교사는 일반적으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개인의 수준에 맞게 인도하고, 동기부여하고, 감정을 보듬어주는 전방위적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미 다가온 미래’인 AI 시대

AI 시대 전환과 주민자치

에 AI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존재인지, 행정에 있어 주민과 AI는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가? AI 시대에 대비해 일선 자치행정 현장과 지역주민들은 어떤 학습과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가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얼마 전 필자는 일선 구청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우수공무원을 심사했다. 그런데 출품한 우수 행정사례에는 전산직도 아닌 일반 행정직공무원이 감사 사전예방 인공지능(AI) 챗봇(GPTs)을 구축·운영한 사례가 올라왔다. 챗GPT 기반 감사 사전예방 인공지능 챗봇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개발해, 예산도 없이 챗GPT내 GPTs 기능을 활용해 담당자가 직접 개발한 것이다. 정부데이터센터 화재로 법제처 등 외부 법령시스템 사용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사전에 다운로드해 둔 법령·지침 파일용 기반으로 챗봇이 정상 운영돼 현장 업무활용에 공백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지방정부에서 AI는 행정업무의 효율화, 주민 서비스 향상 그리고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지방정부에서 AI의 도입은 실제로 공무원의 업무처리 시간을 감소시키고, 행정업무 도입에 따른 시간 절약 효과도 주민 283만 시간, 공무원 178만 시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결국 AI 도입으로 지역주민에게 생기는 시간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AI/RPA 도입 가이드 라인’을 중앙정부가 책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200년전 산업사회가 1950년 경부터 정보사회로 되더니, 이제는 AI

시대로 훌쩍 뛰어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이미 다가온 미래’인 AI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다행스럽게도 김대중 정부에서는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한국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깔고 정보사회를 선도했다. 현 이재명 정부는 AI 강국으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나라와 국민들에게 매우 고무적이다.

주민자치 일선 행정 현장에 AI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과연 어떻게? 시대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고, 쓰면 또 편리하기에 AI의 기능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까 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생산되는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한다고 한다. 디지털로 저장된 정보를 읽고 사용하며, 기술적 활용뿐만 아니라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AI 리터러시는 AI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AI를 일상적 도구로 활용하며, AI의 개발 및 구현, AI 기술의 사회적 활용 및 적용,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주권정부에서 주민자치가 성숙해 나가기 위해, AI로 인한 새로운 시대에서 주체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기초적인 능력을 주민 스스로 배양해야 할 것이고, 일선 지방정부는 이를 도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주민들은 A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의 삶을 디자인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한다. 필자가 섬기는 ‘포자주자시민자치시민들’, 약칭 ‘포자주자시민들’에서는 2026년 1월부터 AI학습을 하기로 했다.

독자투고



다 안전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새해는 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한다. 그중에서도 안전은 모든 일상의 출발점이며, 화재 예방은 그 기본이 된다.

병오년 불의 기운을 ‘안전’으로 다스리자

새해를 맞아 특별한 다짐보다 먼저 생활속 안전 약속을 점검해 보길 권한다. 난방기기사용 후 전원 차단, 가연물과의 거리 확보, 노후 전기배선 점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하는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상구와 대피 동선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 역시 소중한 새해 선물이 될 수 있다.

또한 화재 예방은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화재 발생 시 가

장 큰 위험은 불길보다도 연기와 유독가스다. 평소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가족과 함께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2026년 병오년 불의 해가 지닌 불의 기운이 위험한 불길이지 아닌, 서로를 비추는 안전의 불빛이 되길 바란다. 새해에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더 안전한 고흥, 더 건강한 일상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황성진·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새해 화두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반드시 가야 할 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신문 앞에서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시·도는 실무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본격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새해 벽두에 행정통합이 지역사회의 메가트론급 이슈로 뒹군다. 그도 그럴 것이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서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지사 후보들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관심도 높다.

통합 시장을 뽑아 7월1일부터 대통합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강 시장과 김 지사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정부가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만큼 행정통합을 선도해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대전·충남이 수도권에 필적할만한 충청권으로 발돋움한다면 호남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배어 있다.

광주와 전남은 천년의 공동체, 한 뿌리지만 행정적으로 분리되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경제발전에서 더 소외되고 위축됐다. 국가사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 갈등을 부르고 상생 현안마저 결들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

다. 글로벌 추세인 AI(인공지능) 에너지 시대를 주도할 대한민국 대표로 무한의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등 자원이 풍부하고, 광주는 연구 및 실증 기반 등에 강점이 있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정통합에 전폭 지지하는 입장이다. 수도권 일극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다극체제 실현에 국정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해 기회를 잡아야 한다.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 교부세 추가 배분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특전이 검토되고 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론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가 규약안을 승인,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특별광역시연합 설립도 투트랙으로 동력을 살려야 한다.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동력이다. 행정통합을 위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정치적 이해를 넘어서는 문제다. 진정성을 가지고 준비해주길 바란다.

AI 주도 창의인재 양성에 박차 가하는 지역 교육청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교육청은 새해 AI 기술을 한 곳에서 체험하고 배우며 즐기는 전문 교육원을 북구 오치동에 열었다.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을 함께 갖춘 성장을 담은 비전 실행을 위한 기관이다. ‘AI+KOREA+ON’의 합성어인 ‘아이콘(AI KON)’을 상징으로 광주의 주력인 자율주행과 에너지, 헬스케어와 연계된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전남교육청은 학생 주도성 키움과 AI 기반 수업 확산에 나서 유아 22개, 초등 34개, 중등 17개 등 총 73개 ‘2030교실’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존 133개를 포함해 총 206개가 운영될 전망이다. 2030교실은 국내외 기관과 교류 및 생활 속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인구 감소·지역 상생 등 학교 급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선보인다.

현대사회는 AI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있다. AI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사회적 구조 자체를 재편하고 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신기술은

점점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인간의 삶을 더욱 다채롭고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올해 AI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게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사활을 걸었다. 수많은 기업들은 중심 가치로 설정했다. 광주·전남 교육청에서도 AI를 학생 교육의 중심에 두는 이유다. 해서 AI에 대한 이해 및 탐구 수업을 한층 강화한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성장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업 연구, 성과 나눔으로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활용되도록 주력할 예정이다.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기회를 제공해 AI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스스로 연구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보다 심도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AI는 눈 앞에 다가온 현실이다. 유아·초등·중등 등 학교 급에서 고르게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 미래교육의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더 새로운 세상을 향한 대전환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름없는 시

독설과 하이드

전 속



유배지에서 섬이 된 플라스틱 그것들의 종착지는 슬프게도 바다였다 바다는 모든 종들의 고향이었다 그렇게 고향은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다 모든 종들은 플라스틱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플라스틱 무덤에 묻혔다 출생이 곧 무덤인 영생의 삶이 반복되었다 지킬 박사는 떠나버린 미래였다 플라스틱으로 재구성된 허는 침묵했다 (시집 ‘바다가 우는 방식’, 시와 사람, 2025)

【시의 눈】

세계의 바다는 미세플라스틱이란 독설로 지배당하고 있다. 생명력 가득한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가 날카로운 독설에 병들고 치쳐가고 있다. 한 때 ‘미래의 재료’로 화려하게 등장한 그의 아심과 감언이 설에 속아 그 곁 향기에 푹 빠졌었다가 늦게야 속을 알고 허둥지둥 언어를 정화하려고, 실과 빠김속이 전이된 독기를 빼내려 눈물겨운 치유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다. 독설의 시작은 놀라운 혁신과 편리함에서 시작했다. 실제 그 편리함의 향내와 단맛에 중독되고 잔혹 취해 살아왔다. 플라스틱은 돌변했다. 감춰둔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인류의 고향인 바다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아심은 온 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만드는 것 스스로 몸을 부스르드리고, 깎고, 찢고, 마모시켜 바다에 흘려버리고 한다. 맑은 노래를 품었던 바다는 폭력의 독기에 오염되어 독설을 내뿜는다. 지킬의 플라스틱이 하이드의 플라스틱으로, 지킬의 바다가 하이드의 바다로 변신을 강행한다. 생명의 바다가 하이드의 무자비한 폭력에 충격을 받는다. 선한 자이가 약한 자이에 지배되고 가스라이팅돼 독을 품는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다. 출생이 곧 무덤인 영생의 삶이 반복되는 파멸을 시인은 경고한다. 에베레스트 정상부터 심해해구까지 덮는다. 〈윤상현·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991)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